

인도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배경과 전망

- 최근 글로벌 경제전망 기관들은 인도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2012/13년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조정함.
 - 5월 21일과 26일에 걸쳐 OECD,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인도의 2012/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7.2~8.2%에서 6.5~7.1% 사이로 하향조정함.

표 1. 각 기관 경제성장 및 신용전망 조정

기관	일자	수정전망치(%)	기존전망치(%)	조정 배경
골드만삭스	5월 26일	6.6	7.2	투자둔화, 정책부재, 재정적자, 대외여건악화(유럽위기) 등
메릴린치	5월 26일	6.5	6.8	
모건스탠리	5월 21일	6.8	7.5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정치적 불안정
OECD	5월 21일	7.1	8.2	
인도정부	3월 10일	-	7.3	
S&P	4월 25일	'부정적(BBB-)'	'안정적(BBB-)'	투자둔화, 경상수지적자 우려

자료: 언론자료 종합

- 전망 기관들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와 인도정부의 정책적 리더십 부재가 인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유럽 재정위기는 물론 최근 물가상승,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확대 등 인도의 대내외 문제가 외환시장 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루피화 가치 폭락이 다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 o 5월 평균 루피화 가치는 달러당 54.23루피로 연초대비 18%하락하였으며, 4월 WPI증가율은 7.2%¹⁾로 전월 6.9%보다 0.3%p 증가함.

그림 1. 인도 환율 및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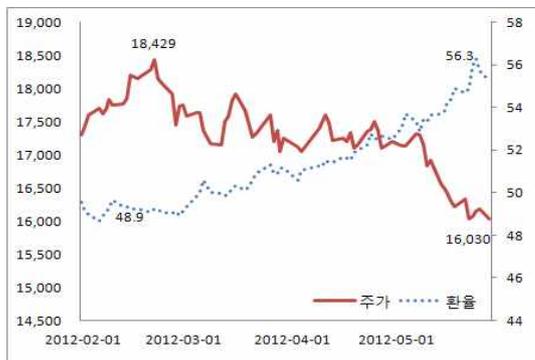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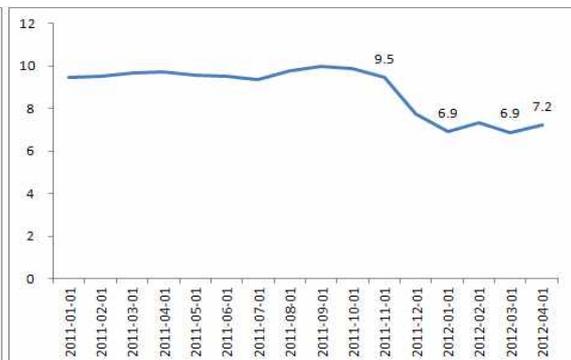


그림 2. 최근 WPI증가율 추이(%)



자료: CEIC

- 또한 최근 인도정부의 △조세규제강화, △개방정책 지연, △부정부패 등이 외국인

1) 4월 WPI증가율은 당초 인도정부의 예측치인 6.67%보다 높은 수준임.

투자를 위축시키고 인도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지난 4월 인도 자산을 해외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소급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2007년 인도회사 지분을 인수한 보다폰에 대해 약 2,000억 루피의 세금을 부과한바 있음.²⁾
- 조세개혁 및 유통시장 개방 등 현 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통신주파수 및 광산 개발권 등 부정부패 문제가 만연하고 있어 외국투자자들의 불신이 확대됨.

표 2. 최근 인도 경제위기 요인

구분	약재요인	내용	조치 및 결과
경제 지표 악화	루피화 가치 하락	- 연초대비 약 17% 하락 - 5월 24일 연중최고치 기록(56.37루피/달러)	- 외화수입 50% 루피화 전환 의무
	투자 감소	- 주식, 채권시장 등 투자자금 이탈	
	재정적자/경상수지적자 확대	- 재정적자 GDP 대비 5.9%, 경상수지적자 4% - 유럽·미국 수출 감소 확대, 국제원유가격 상승	- 보조금 감축 시행
	인플레이션 지속	- 2012년 4월 WPI 증가율 7.2%(전월 6.9%) - 인도 내 연료가격(휘발유, 디젤) 인상 - 몬순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저하 우려	- 추가 금리인하 부담·금리 0.5%p인하(4월)
정책 문제	조세규제강화	- 외국기업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소급적용	- 인도 내 외국기업 반발 확산
	개혁정책 지연	- 조세개혁, 유통시장 개방 등의 지연	- 관련정책 추진 지연
	부정부패	- 통신주파수 및 광산 개발권 관련 부패스캔들	- 반부패법 추진 지연
정치적 불안	좌파 정당 지방선거 승리	- 개혁개방정책 추진동력 상실	- 포퓰리즘 정책 우려

자료: 언론자료 종합

■ 인도정부의 모호한 정책 및 만연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등은 인도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하락시켜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임.

- 무디스는 최근 인도정부의 정책적, 정치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도의 장기 성장에 의문을 제기함.³⁾
- 인도 정책연구센터 역시 최근 인도정부가 '신뢰도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언급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지적함.

(송영철 연구원)

2)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은 2007년 홍콩 허치슨 커뮤니케이션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을 107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도 대법원은 "보다폰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 인수는 면세지역인 케이맨 제도에서 이뤄져 22억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소급해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결한바 있음. 그러나 인도정부는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외국 기업의 인도 자산 매입을 1962년 4월까지 소급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함.

3) <http://www.cnb.com/id/47615018>